

데스크시각

정 후 식



인권(人權)은 누구나 사람답게, 자유와 독립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개별국가에선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통칭한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비대해질 경우 곧잘 인권과 충돌해 갈등을 빚곤 한다. 개인의 권리를 억누르려는 속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경이로운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이 땅의 인권은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군 사독재의 폭압과 권위주의, 경제성장과 안보라는 미명 아래서 신음해야 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일상적 자유를 공기처럼 만끽하게 된 것은 금세기 들어서 일 것이다.

뿌리째 흔들리는 국가인권위

그 토대가 된 것은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이었다. ‘인권 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인권위의 탄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의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범한 국가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의 기준을 제시해왔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쫓돌집회 과잉징압, 비정규직법 등은 물론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권고와 의견을 내왔다. 지난해까지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시정 권고 1천200여 건이 받아들여져 수용률이 90%에 달했다. 2005년 10월 문을 연 광주사무소도 지난해만 4천700여 건의 진정·상담 등을 처리했으며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인권위의 이 같은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의 품격을 크게 높였으며 모델 사례로 연구대상이 됐다.

인권의 지렛대이자 보루 역할을 해왔던 인권위의 위상이 최근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용을 잃었다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현행 A등급을 B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등급이 강등되면 우리나라는 ICC 투표권을 잃게 된다.

인권위는 ‘때론은 당사’이러던 ICC 차

다. 인권위는 ‘독립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정원의 21%가 감축됐다. 다행히 광주사무소 등은 존치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도마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들이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사실상 묵살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인권수준은 곧 국가의 품격

안경환 전 국가위원장장은 지난해 초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물러나면서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인권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경구도 결들었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던 사회 각계 시국선언의 화두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상회복’이었다.

지난 세기의 발전모델이 경제성장이었다면 21세기는 인권 존중과 환경 보호 수준이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결정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 일류국가는 단순히 1인당 소득이 얼마나 하는 것보다 모든 분야에서 선진 일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면 인권위의 위상부터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인권위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임 명 재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후보 시절부터 그 어떤 후보도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얻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도 승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역시 예측을 벗어 나지 못했다. 그래서 모두가 답답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도 이전의 선거에서와 같은 열정을 느낄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정부에서 각종

방해하는 폭도로 규정했으며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다. 최근의 미디어법을 통해 이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지켜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정부를 우리의 손을 뻗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배할 정령군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한 사람이 나 세력에게 마치 정령군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서 그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한다면서 부자들에게 대해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4대상 살리

이명박 대통령과 정령군

경제지표에서 소위 잘나갔지만 서민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으며 그 이유가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후보시절부터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다.

아직 이대통령의 정책들이 확실히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여당은 선불리 판단하지 말아줄 것을 설득하며 결국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노동자의 삶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고 언젠가 곧 좋아지지만 하면 더 나은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침체는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외환위기에 맞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세계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는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경제가 좋아질 때를 대비한 힘을 비축하기 위해 말이다.

수입신고기 반대집회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통해 더 나은 수출환경을 통해 잘살게 될 것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했다. 융산사태에서 희생된 서민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폭력으로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로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 고

고 용 석



과학자들은 다소 임의적이지만 온실가스의 온난화 영향을 이산화탄소 평균 수명이 100년에 걸쳐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평가는 이산화탄소만 중요해 보이게 하고 다른 가스들은 덜 중요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하나 빙하가 사라지고 영구 동토층이 녹는 등 급속한 온난화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재, 장기적 이산화탄소 통제와 함께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메탄과 블랙카본, 대류권 오존 같은 단기성 온실가스가 북극 온난화의 주범이

연관되어 비용이 비싸고 어렵다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가난한 국가도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화석연료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이런 길 줄이기는 방법은 간단하거나 저렴할 수가 없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하루만 비건(완전채식)을 한다고 하면 한 해에 10%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순 배출량은 40~60%으로 추정하면 만일 매일 모두 비건채식을 한다면 70%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셋째, 문제는 시간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2년 내에 신속한 행동을 취

채식으로 단기성 온실가스 줄이자

며 단기성이기에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급속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짧은 수명의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탄이며 메탄의 최대 원천은 축산업이고 채식은 메탄감축과 비용면에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첫째, 이산화탄소를 반으로 줄이는데 75년이 걸리는데 반해 메탄은 단지 8~9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100년간 23배, 20년간 72배 이상 강한 온실가스이다. 메탄은 또 다른 단기성 온실가스인 대류권 오존의 생성에도 영향을 준다. 메탄과 오존을 합하면 이산화탄소의 절반에 가까운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다. 유엔에 따르면 육류생산으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70%가 불태워졌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검댕이 남극의 블랙카본의 60%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고도의정서는 메탄을 고려한 잠재적이고 단기적인 이점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

둘째, 이산화탄소는 에너지 체계와

해지 않으면 온난화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건너게 될 거라고 경고한다. 세계가 올 12월 코펜하겐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가 실현되고 지속 가능한 전환 기술이 널리 도입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미국환경보호국과 IPCC가 행성을 식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메탄감소의 이점을 고려하기 시작한 이유이다.

올 2월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가 단지 전 세계가 10~15년간 채식을 한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2도 미만, 즉 2050년까지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에 안정화시키는 기후 목표의 80%를 해결될 것이며 이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실제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슈퍼맨이 되거나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 단지 밥상을 채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고기 한 조각 버리는 것,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자신과 가족, 미래세대와 수많은 생명을 위해서 말이다.

<생명사랑채식실천협회 대표>

만취자로 인한 지구대 치안 공백 없어야

얼마 전 우연히 만취한 남자가 지구대에서 화풀이식 행패를 하는 것을 보았다. 경찰도 아무리 만취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분통터지는 속을 삭이며 만취자를 달래느라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지구대에 신고되는 사건 사고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과 관련된 경우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법질서 경시 풍조로 인해 주취자가 주된 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인권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치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구대에서 이 같은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취자에게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입건시켜야 한다.

경찰관들이 만취자를 처리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인 순찰과 범죄예방에 소홀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정으로 인권이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는 인권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통동

시 설

‘복합단지’ 선정 정치·지역논리 배제돼야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후보지인 광주시 진곡산업단지에 대한 현장 실사가 오늘 실시된다. 광주시는 이날 현장 실사에서 입지여건의 우수성과 입지확보의 용이성 등을 부각시켜 진곡산단에 의료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지라는 점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에 복합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복합단지 사업은 5조6천억원을 투입,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등 100만㎡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82조원의 생산 증가와 38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꿈의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복합단지 유치신청 지역은 진곡산단을 비롯해 10곳에 이른다. 이들 지자체들은 입지 선정(10일)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상대 지자체에 대한 비방과 권역별 합종연횡도 서슴지 않고 있다. 벌써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설도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복합단지가 어디로 결정되든 심각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복합단지 최적인 입지에 들어서는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단 구성·심사가 불권부당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논리나 지역색은 철저히 배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지자체 살림을 돕는 구호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드는 중차대한 과업이다. 복합단지는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차세대 산업으로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에 선정돼야 한다. 진곡산단에 대한 현장실사도 이런 관점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학 총장 직선제 손질할 때 됐다

대학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2007년 제13대 총장 선거때 총장 후보들이 제14대 선거부터는 직선제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선출 방식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유수택 조선대학교교사장은 3일 “연내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올 초부터 교수 평의회 주관 아래 총장 직선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도입된 총장 직선제는 교수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단 견제기능 등 한때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는 대학 개혁과 외부자원의 동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과열 선거운동과 혼탁한 선거문화로 구성원끼리 파벌이 생기고 반목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왔다. 구성원 간 반목과 대립으로 면학 분위기가 깨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과 교수의 연구시간 침해 등으로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외부 환경변화로 직선제를 고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대학총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행정능력과 학문적 탁월성은 물론 경영의 전문성까지 갖춰야 한다. 대학 간 혁신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총장 직선제는 글로벌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이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내외 인사를 적극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외국 석학을 총장으로 영입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광주·전남 지역대학들도 구성원들의 충지를 모아 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

無 等 鼓

십수 년 전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와 별교여행을 한 적 있다. 새벽녘까지 술취함을 하면서 ‘태백산맥’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조씨의 부인 김초혜 시인으로 부터 뽕통 아단을 맞기도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 묵었던 곳이 바로 ‘태백산맥’에 ‘남도여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현재의 보성여관이다. 소설 속에서 남도여관은 경찰토벌대장 임만수와 대원들이 속소로 사용했던 곳으로 묘사된다.

보성여관의 외양은 그리 크지 않다. 부지 529㎡(160평)에 건평 416㎡(125평) 규모로 아담하다. 그러나 건물 외벽은 목재 비틀판벽에다 일본식 기와로 지붕을 이고 있는 걸 보면, 1935년대 한창 번창하던 벌교지역의 역사를 짐작케 한다. 창여단으로 된 주 출입문이나 다양한 모양의 유리창, 골목 등도 옛모습을 그대로여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절로 낸다. 보성여관은 광복 이후까지 여관으로

로 활용돼오다가 1988년 가계점포로 사용되는 등 한때 위기를 맞은 적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고 이어 지난해 6월 이를 사들여 현재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관리하고 있다.

이 보성여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 7월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탄생한다고 한다. 수많은 중·개축으로 인해

변형된 1층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뒤 갤러리와 카페로 활용하고, 탐방객들을 위한 민박체험공간으로도 제공할 모양이다. 제대로만 복원될 경우 지난해 문을 연 태백산맥문화관과 함께 벌교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명소로 활약이 기대된다.

그러나 관광만을 염두에 둔 복원은 곤란하다. 보성여관은 일제시대 숙박시설의 공간구성과 형태를 연구하거나, 당시 벌교읍의 상권과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복원작업을 기대한다. /이종태 사회2부장 jtl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 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6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론대처부 2200-679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